“연중무휴 심야약국 지쳐요…시급 올리고 요일제 운영을”

‘한밤의 119’ 공공심야약국 〈하〉 운영 12곳 약사에 물어보니

‘심야 119’나 다름없는 공공심야약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약사들의 운영 부담을 덜어주고, 재정적 지원을 강화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남 지역에서 공공심야약국을 운영 중인 11개 시·군 12개 약국 약사들은 심야시간에 일할 인력 구하기가 힘들고 인건비도 되지 않은 턱없이 부족한 지원금에 365일 연중무휴로 일을 해야하는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공공심야약국이 늘어날 수 있다고 한결같이 제언했다.

◇365일 연중무휴…혼자서는 절대 못해=광주일보가 목포·여수·순천·나주·광양 등 도심형약국(도시)과 구례·고흥·보성·영암·무안·신안 등 비도심형약국(시골) 모든 심야약국 약사들에게 문의한 결과, 약사들은 공공심야약국이 늘지 못하는 이유로 ‘인력수급의 어려움’을 첫손에 꼽았다.

절대적인 근무 시간이 늘어나다 보니 약사들 대부분은 “공공심야약국은 혼자서는 절대 못 한다”고 했다. 그렇다고 인력 충원을 해 유지하기에는 운영난에 봉착할 정도로 지원금이 모자란다고 했다.

도시 약국의 경우 심야 약국까지 운영하려면 최소 3명 이상의 약사가 필요하다는 게 심야약국 약사들의 목소리다. 현재 목포 공공심야약국은 3명이 오전, 오후+심야 순으로 교대 근무를 서고 있으며 순천·광양은 4명이 교대로 근무 중이다. 2명이 근무하려 하면 업무가 지나치게 많은데, 그렇다고 야간 시간 3~4시간만 일할 약사를 구하자니 그 정도 급여를 받고 일하겠다며 지원하는 약사가 없는 형편이다.

시골 약국의 경우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시골은 지원자가 많지 않고 혼자서 운영하는 경우가 대다수기 때문에 지속적 운영을 위해서는 단 며칠이라도 대체 인력을 투입하는 방안이 서둘러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1인 약국으로 운영되는 시골약국 약사들은 모두 ‘365일 연중무휴로 일하는 점’을 큰 부담으로 꼽았다. 경조사, 갑자기 아플 때나 명절 당일에도 전혀 쉬지 못하고 자리를 비울 수 없고 체력적으로도 힘들다는 것이다. 사실상 개인생활이 전혀 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푸념도 들린다.

쉬는 날 거의 없어 혼자서는 못해
인력 충원해 유지하기엔 운영난
시골은 페이 약사 구하기도 힘들어
재정 지원 강화 등 활성화 대책 필요

이같은 점 때문에 시골 약국 중 3곳은 올해를 끝으로 공공심야약국을 그만두려는 고민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후 2시부터 밤 12시까지 매일 근무하는 여수의 한 약사는 “혼자서 연중무휴로 13시간씩 일하고 있는데 젊을 때야 가능하지 언제까지 가능할지 모르겠다”며 걱정했다.

약사들은 최소한 인근 약국 2곳에서 함께 운영을 하는 방안을 내놨다. 2곳에서 4일, 3일 정도 요일을 나누거나 ‘주차 홀짝제’처럼 나눠 운영하면서 인력 문제를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급한 상황이 생기면 정책적으로 대타 인력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되면 좋겠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일하겠다는 약사 오게 할 지원금도=대다수 약사들은 또 ‘부족한 지원금’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약사는 현재 시간당 4만원 임금은 인력이 여유있는 수도권 기준이라는 지적했다. 수도권에서는 단기간 약사를 구하기 쉽지만 지방에는 짧은 시간 일하러 나오는 약사들도 없고 조금 더 오래 근무하는 조건으로 고용하다 보니 비용이 더 나갈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주간 약사 시급이 세후 4만원 정도인데, 현재 공공심야약국 시급은 3만6480원인 걸로 보아 야간 운영을 위해 페이 약사를 구하는 건 구조적으로 어려운 문제라는 것이다.

또 한 약사는 “페이 약사의 급여가 보통 3만5000원 안팎이다. 심야 시간에는 1.5배 이상이 돼야 하니 최소 5~6만원은 지급돼야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한데 이마저도 개인생활을 중요시 하는 요즘 사람들에게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시골 약국은 환자 수가 적어 수익이 나지 않는데, 인건비를 지급하려면 비도심형 약국에서는 6만원 이상으로 책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주간 약사 급여가 일반적으로 시간당 4만원이니, 야간에는 2배까지 책정해 8만원 정도를 보장해줘야 오지 않겠냐는 것이다. 약사들은 현재 환경을 감안하면 외부 지역의 약사를 고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지원금이 나와야 공공심야약국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일부 약사들은 지원금과 상관없이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필요성도 주문했다.

지자체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심야약국의 운영 여부나 취지가 알려지면 지역민들의 관심도 커져 지원이 확대되고 시골 지역에서 근무하려는 약사들도 많아지지 않겠냐는 얘기다. 이같은 요구는 심지어 전남의 1호 공공심야약국으로 5년째 운영 중인 목포 지역 약국에서도 제기됐다.

이태영(43) 구례군약사회 회장은 약국 마감시간부터 심야 운영 시작 전까지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공공심야약국 운영은 밤 8시부터 새벽 1시까지 중 이뤄진다. 보통 약국은 병원이 끝나는 시간인 6시에 마감하는데,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6시부터 8시까지 최소 2시간 정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구인난이 심한 비도심형, 시골 약국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책을 세심히 검토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황일봉 전 5·18부상자회장 등 6명 재판에

보조금 부정 수령 등 혐의

황일봉 전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장을 비롯한 5·18부상자회 관계자 6명이 국가보조금 부정 수령, 유령 직원 급여 지급 등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은 지난달 24일 황 전 회장과 전 부상자회 간부 직원 A씨 등 3명을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5·18부상자회 직원 등 3명에 대해서도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황 전 회장 등은 별도의 공고나 채용절차 없이 허위로 직원 3명을 등록해 보조금 3400여만원을 부정 수령하고, 지난 2022년 국고보조금 4000만원을 받아 중고차 3대를 구입한 뒤 한 대를 A씨와 배우자가 1년 여 동안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국가보조금을 부정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부상자회 산하 수익사업체가 6200만원을 주고 산 고급 차량을 수익업체 관계자에게 1000만원에 팔고, 이사회의 의결없이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보험상품 5건을 중도 해지해 총 1억 4500여만원의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등 배임 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국가보훈부는 지난해 5·18부상자회를 대상으로 감사를 벌여 이같은 사실들을 적발하고 부상자회에 기관경고, 총 16명(중복포함)에 대한 징계처리, 1명에 대한 신분상 주의 조치를 요구했으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황 회장은 스스로를 ‘바지 사장’이라고 지칭하고 A씨가 5·18부상자회와 공로자회 두 단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해왔다고 밝히며 A씨와 고소·고발전을 벌이기도 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마약류 투약 유아인 집유 확정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39·본명 엄홍식)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마 흡연 교사 혐의와 수사가 시작됐을 때 지인들에게 휴대전화 내용을 다 지우라고 요구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에 대해서는 원심의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유아인은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아인은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나, 올해 2월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돼 풀려났다. /연합뉴스

“어르신들 건강한 여름 나세요” 광주시 북구청 직원들이 3일 중흥동 무더위 쉼터로 지정된 경로당을 찾아 선풍기를 점검하면서 폭염시 대처 방법 등을 어르신들께 설명하고 있다.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조합장 후보 비방 우편물 조합원들에 발송 수사

광주광산경찰, 경위 조사

광주의 한 지역농협 조합장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에 대한 비방 우편물이 조합원들에게 발송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일 광주광산경찰에 따르면 전날 지역농협 조합장 A후보를 비방하는 글이 담긴 우편물이 조합원들의 자택으로 발송됐다는 고소장이 접수됐다.

고소장은 오는 9일 치러지는 해당 지역농협 조합장 재선거를 앞두고 A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과 비방하는 글이 담긴 우편물이 불특정 다수 조합원들에게 발송됐다는 내용이다. 해당 지역농협 조합장 선거에는 모두 5명이 후보로 등록됐다.

우편물에는 A후보의 과거 행적과 내부 고발 등 A후보를 겨냥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며 선거법 위반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